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48호

대한축구협회(KFA)

윤리와 규정사이... '태극마크 딜레마' 황의조 사태, 축구협 결국 철폐 선회

김용일 스포츠서울 기자

다이빙 국가대표 A씨, '성폭행'으로 조우영 감독 형사고소

[단독]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조해수, 김현지 시사저널 기자

가해자 복귀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만

'스포츠 강국'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경상대 교수)

대한체육회... 6개월 시간 끌다 '책임 없다' 면책 결론

'고치숙현 사건' 문체부 징계 요구 뒤집어... 이기흥 회장 "이사회 결의라 할 말 없다"

황수오 CNB 기자

따돌림 유언비어 유포 24.3%... 40.6%는 대응 못해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40% "인권 침해 당했다"

김재경 더팩트 기자

'2023 광주지역 생활체육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80%가 비정규직

황해윤 광주드림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윤리와 규정사이... '태극마크 딜레마' 황의조 사태, 축구협 결국 철회 선회

전 연인과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스트라이커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황의조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최영일 부회장을 비롯해 이윤남 윤리위원장과 마이클 윌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등 각 분과위원이 1시간30분가량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없지만,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면서 정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대표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시적으로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반납하도록 한 결정을 설명했다. 또 “(황의조 사태가) 대표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출전하면 팬이 느낄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의 '태극마크 자격'을 두고 논란이 거뒀다. 그는 지난 21일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앞두고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중국전에 출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황의조는 범의자가 아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경기 출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KFA도 “의혹만 있을 뿐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면서 같은 기조였다.

이후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향한 질타 목소리도 나왔지만 KFA는 타 종목과 다르게 올림픽, 아시안게임처럼 종합대회에 한해서만 체육회로부터 훈련 및 선수 발탁 등 승인을 받고 있다. 월드컵 예선 등은 KFA가 자체적으로 대표 선수를 뽑고 운영한다. 체육회 역시 “종합대회 외엔 각 종목 IF(국제연맹) 규정에 따라 대표팀을 운영한다. 황의조 사태는 우리가 승인하는 국가대표 강화훈련 기간 등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조작 의혹을 받은 전 축구 대표 장현수(알 힐랄), 2021년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배구 국가대표 정지석(대한항공) 사례를 언급하며 맞섰다. 장현수는 KFA로부터 대표 영구 박탈 징계를, 정지석은 체육회로부터 대표선수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현수는 당시 혐의를 이르게 인정했고, 정지석도 체육회가 승인해야 하는 강화훈련 기간에 벌어진 일에서 '규정대로' 처리가 가능했다. 황의조는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KFA가 여론을 의식해 무작정 징계를 매기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KFA도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황의조는 사회적 공인으로 도덕적 물의를 넘어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KFA에 엄중한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여러 시민단체까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체육시민연대는 24일 ‘성관계 불법 촬영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뭘 자격이 있는가’라며 ‘(KFA는) 논란이 해소되기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했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고, 여성민우회는 앞서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 뛰는 모습은 불법 촬영을 해도 문제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KFA가 '철회 기조'로 돌아서면서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을 대비하는 '클린스만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황의조는 조규성(미트윌란)과 대표팀 최전방 원톱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유럽파 핵심 요원이다. 그러나 아시안컵 전까지 그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클린스만 감독은 단기간에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 황의조로서는 아시안컵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까지 갈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태극마크와 사실상 이별할 위기에 놓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 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 아니라 형수로 밝혀졌다. 황의조는 지난 26일 열린 2023~2024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17라운드 퀸즈파크 레인저스전에서 전반 21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며 노리치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2호 골을 넣은 그는 최근 논란에도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일각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돼 비난 여론이 더 커졌다.

황의조는 지속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연인과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며 맞서고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75453?ref=naver>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다이빙 국가대표팀 지도자인 조우영 인천시청 감독이 다이빙 국가대표인 A씨를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했으며, 십수 년간 인천시 초·중·고와 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에게 돈을 상납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조 감독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하고, 돈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인천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만 18세 때 성폭행”...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시사저널은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와 인터뷰를 갖고 A씨의 고소장·진정서, 증거로 제시된 계좌내역, 녹취록, 사진, 관계자 사실확인서 등을 입수했다. 인천 지역 다이빙 선수·학부모 등도 접촉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인천시청, 인천시체육회,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도 취재했다. 마지막으로 조우영 감독의 해명을 들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종결)했지만,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조우영 감독은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성폭행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이면,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해당하는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우영 감독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도 ‘A의 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감독의 고소를 무혐의 종결했다. 조 감독은 성폭행-돈 상납 의혹에 대해 “A를 이용한 파벌싸움”이라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 관련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인천시청은 사실 확인·징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스포츠윤리센터는 2019년 스포츠계 ‘미투(Me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따라 2020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신고 시효가 있는데 성폭력은 5년, 비리는 3년”이라면서 “성폭력 건은 시효가 지났고, 비리(돈 상납) 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우영 감독이 실업팀을 맡고 있는 인천시청 측은 “인천시는 직장 운동경기부의 운영사무를 인천시체육회에 위탁한다. 이 사건을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실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실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돈 상납과 관련해서는 선수 전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감독 “A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다” 부인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우영 감독에게 제기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조우영 감독이 여자선수를 성폭행하고, 2012~23년까지 인천 전체(초·중·고) 다이빙 선수들에게 회비·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 받았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고 있다. 실업팀의 경우 본인이 상납받은 게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방법을 바꿔, ‘스승의 날’ 때 선수들에게 자발적인 것처럼 꾸며 연봉액 대비 10%씩 고가의 명품을 받고 있다.”

성폭행은 A씨가 미성년자였던 만 18세에 일어났다고 한다. 다음은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2015년 12월7일 제주도 동계훈련을 가기 전에 조우영 코치님이 ‘(A씨의) 집이 공항에서 먼 거리니 우리 집(조우영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같이 공항으로 가자’는 제의를 하시면서 ‘집에 부인과 아이들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전에도 다른 다이빙 선수들과 같이 간 적이 있고, 내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얼굴도 볼 겸 조 코치님 집에 갔다. 하지만 부인과 아이들은 없었다. ‘언제 오시냐’고 물었을 때 ‘올 거야’라는 말뿐이었다. 밤이 늦었기에 할 수 없이 조 코치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내 옆에 누워서...(중략)...반항을 했다. 그때의 두려움과 수치심은 지금 생각해도...나는 그 당시 열아홉 살(만 18세)이었다. 나이도 어렸고 무서워서 부모님께도 바로 얘기할 수 없었다. 조 코치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고, 날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고 죽고 싶었다. 여지껏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무서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 큰 두려움은 계속 국가대표를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얘기하면) 선수 인생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조우영 감독을 만났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조 감독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조우영 감독은 “A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감독은 “그때 나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 관련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당시 조 감독은 합숙훈련 일주일 전부터 ‘자기 집에서 자고 같이 가자’고 했으며, 사건 당일 내가 조 감독 집에 간 것을 친구, 동료 선수, 다른 지도자도 알고 있다. 이들이 사실확인서도 써줬다”면서 “또한, 조우영과 어머니의 만남을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인천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인천서부서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2주가량 연락이 안 되더니 갑자기 ‘사건 기일을 오래 잡을 수 없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10월말, 인천지검에서 ‘수사가 재개됐다’고 통보해 줬다”고 말했다.

“조 감독 자동차 서랍에 500만원 넣어”

A씨는 조우영 감독이 어떤 식으로 돈 상납을 받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 감독이 인천 지역 다이빙계 전반에 걸쳐 장기적·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돈 상납 실태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5년 실업팀 계약 전까지 매달 30만원씩 학부모 B씨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계좌를 통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도 ‘다이빙 레슨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30만원씩 입금했다. 2018년경 조우영 감독은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수영연맹’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2022~23년 조 감독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다른 지도자에게 부탁해, 이 법인 계좌로 학부모들의 돈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B씨의 계좌에 30만원씩 입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B씨의 실명과 계좌번호도 명기돼 있다. 또한 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도 폭로했다. A씨는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조우영 감독의 뇌물 수수를 도와준 사람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팀에 입단해도 돈 상납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이빙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돈 상납은 ‘세금’처럼 따라왔다.

“2015~16년 2년 동안 인천시청에 선수로 계약했을 때, 조우영 감독이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실업팀 계약금이 입금된 후 500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다. 어머니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조 감독의 자동차 안 서랍에 넣었다. 조 감독은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현금’을 원했다. 인천시청 소속 □□□ 선수도 줬고, 다른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대표 또는 지도자 자리가 ‘미끼’로 사용됐다고 한다. “조우영 감독은 어린 선수나 학부모들에게 ‘국가대표 만들어줄 테니 내 말 잘 들어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다. 또한 조 감독은 누구누구에게 ‘인천시청 자리 준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다.” 조우영 감독은 돈 상납 의혹에 대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A가 우리(인천시청) 선수들을 찾아와 (증언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조우영 감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나를 선수위원회에 고발해 전국체육대회에 못 나가게 만들겠다는 협박도 했다”면서 “그러나 나처럼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후배들을 생각해서 용기를 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법과 윤리에 맞지 않는 지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 눈 밖에 나면 선수 생명 끝”

대한수영연맹은 2020년 10월8일 “조우영 감독을 도쿄 올림픽,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를 이끌 다이빙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 감독은 대한민국 다이빙 ‘간판 선수’를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다이빙 선수 학부모는 “다이빙계의 경우, 잘나가는 지도자가 초·중·고부터 실업팀, 국가대표까지 좌지우지한다. 좁은 바닥(다이빙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라인(기득권)’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도자가 ‘공인 심판’까지 맡고 있다. 국내 대회의 메달 색깔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한테 찍히면 다이빙계를 떠나야 한다. 선수와 학부모는 지도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 할 수밖에 없다. 뇌물은 당연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스포츠계는 2019년 이미 흥역을 치렀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의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종목에서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드러난 일본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스포츠계 종사자들은 ‘바뀐 것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인 홍덕기 경상대 교수는 “스포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 구조’가 작동하게 된다. 수요자인 선수, 공급자인 지도자, 관리자인 체육단체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한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한다고 해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처리 결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단체에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에 따른 2차 피해도 심각하다.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 피해의 무게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판단해 축소하는 경우,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소문내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회유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등 2차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강국'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2023.12.01
(경상대 교수)

가해자 복귀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만

한국 사회의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의 성폭력 사건(2019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2020년), 프로배구 쌍둥이 여자 선수 학폭 사건(2021년),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2022년) 등 매해 굵직한 스포츠 인권침해 이슈들이 등장했다.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과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스포츠계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 인권침해 원인이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스포츠 분야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폭력은 '대물림'되는데 은폐에만 급급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어떠한 구조 속에서 발생할까?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운동부만의 관행과 위계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에서 경쟁은 필연적이며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과도한 승리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선수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이나 전통과 예의라는 명목하에 폭력적인 위계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다. 때로는 혹독한 상황에서 이를 참고 견디는 것도 훈련의 일부로 용인되는 과정에서 폭력과 훈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모호해지기도 한다. 정신력 강화와 단합을 이유로 체벌이나 폭력은 훈련으로 둔갑한다. 선수들은 폭력을 필요악으로 여겨 순응하거나 오히려 일부 선수나 지도자의 경우 선후배 간 위계질서 등을 이유로 폭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한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스포츠 분야의 폐쇄성은 폭력을 내면화하고 결국 피해자는 미래의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대물림의 고리는 견고해 개인이 끊기 어려워진다.

일단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은폐 구조가 작동하게 된다. 수요자인 선수, 공급자인 지도자, 관리자인 체육단체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어느 한 문제를 푼다고 일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좁고 폐쇄적인 운동부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하기 어렵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으로는 '피해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 '피해의 무게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판단해 축소하는 경우',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소문내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한다고 해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처리 결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단체에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신뢰 없이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 또한,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스포츠 비리도 문제다. 이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승부 조작, 편파 판정, 심판 매수, 불법도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입시 비리, 부정 입학, 사문서 위조 등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일부 스포츠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용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정신력이 나약하다고 폄하하는 인식의 결핍이 존재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스포츠 현장에 다시 복귀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

선진국의 경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듀얼 커리어(Dual Career)'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 학생선수가 전문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못하고 운동 '만' 해야 하는 단선적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는 한 인간으로서 지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지도자는 경기 실적을 중심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경기 결과에만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법을 배워보지 못한 지도자는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지도자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한마디로 '메달 지상주의'로 인해 운동 성적만 좋으면 다른 모든 상황이 용인되는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이 강한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체벌이나 훈육을 통해 선수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을 자극·반응의 대상으로 객체화시킬 뿐이다. 스포츠계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공포, 우울, 소외감 같은 정서적 상처를 아주 오랜 기간 남긴다.

결국, 스포츠계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 징계 기준의 명확성 및 세분화, 신고 의무제 정착, 일벌백계 시스템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의 역할은 스포츠를 국가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결국,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히 존중받는 스포츠 문화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때다.

[단독] 대한체육회, '고 최숙현 사건' 문체부 징계요구 뒤집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이사회 결의라 할 말 없다"

대한체육회가 감독 등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체육선수와 관련된 정부의 징계요구를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CNB뉴스가 내막을 단독 취재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3년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감독, 팀닥터, 선배로부터의 거듭된 폭력에 못 이겨 대한체육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에는 최 선수가 팀닥터로부터 돈 갈취와 상습 폭행, 감독과 선배 선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선수는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최 선수는 결국 2020년 6월 모친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적극 나섰다. 최 선수가 숨진 뒤 한달 뒤인 2020년 7월 '최숙현 사건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고, 일사천리(一瀉千里)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스포츠 비리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숙현 사건 관련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약 1개월 간의 조사 끝에 문체부는 체육계 책임자였던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대한체육회가 김승호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사건 관계자로 파악된 센터장에게 '중징계', 상담사에게 '경징계'를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한 이유로 "최 선수 가혹 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 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CNB뉴스 취재결과 대한체육회는 관련자들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해임을 요구했던 김승호 사무총장에게는 '면책' 조치를, 중징계를 요구했던 센터장에게는 '견책' 조치를, 상담사에게는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면책(免責)'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는 징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경징계에 속한다. '경고'는 말 또는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CNB뉴스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대한체육회 '제46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김승호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사회 결의로 김 사무총장을 면책하는 것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선수가 사망한 것은 2020년 6월이었고,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김 사무총장 해임을 지시한 것은 2020년 8월이었다. 이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김 사무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이사회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사회 이틀 뒤인 2021년 2월 6일이었다. 면책 이후 김 사무총장은 2022년 5월부터 인사혁신처 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법률검토를 하다가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이사회로 이 사안을 이첩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정위에서 늦게 넘어와서 이사회가 늦게 열린 것이지 고의로 징계를 지연시킨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께 직접 보고 드리니 '김승호 사무총장의 면책 관련 사항은 대한체육회 최고 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만 말했다"며 "우리는 이사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이사회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40% "인권 침해 당했다"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10명 중 4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최근 실시한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기관인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9월 선수 286명, 감독·코치 등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서원(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선수 100명을 직접 실태조사 해 학대 의심 사례 9건을 발견하고 상담,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45.9%는 경기단체(협회·연맹) 소속이고 23.4%는 민간기업, 21.2%는 시·도·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이다. 또 응답자의 47.1%는 선수 활동이 주업이고, 학생은 13.4%며, 전문선수는 81.8%, 동호인 선수는 16.3%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35.6%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9.6%로 집계됐다. 반면 '전혀 없다'와 '없다'는 각각 21.8%, 33%로 나왔다. 인권 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엔 72.8%가 '없다'고 했으나, 14.6%는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답했고,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 18.3%, '체벌이나 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를 당했어도 40.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응했다'는 답변은 26.6%였다. 가해자로는 '동료 선수'가 52.6%로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는 40.4%, '코칭스태프'와 '체육시설 직원' '이용자'도 각각 3.5%나 차지했다.

인권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여부를 묻자 10명 중 3명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 시간 역시 38%가 1~2시간 수강, 4시간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선수 절반은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받을 기관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권 침해 신고기관, 권익옹호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42.4%, 55%, 50.2%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역시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부족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비장애인 눈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32.4%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포기'라고 답했고, 22.8%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부족', 22.5%는 '비장애인 눈치가 보여' 체육시설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시설 개선, 접근성 확대, 체육시설 정보 공개, 상담창구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사회가 따돌림, 괴롭힘과 같이 일상의 차별 행위를 인권 침해로 여기는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장애인 선수의 인권 침해 역시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80%가 비정규직

광주지역 생활체육시설 종사자의 8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최근 '2023 광주지역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5월에 걸쳐 대면/비대면 설문으로 진행했고 헬스장, 요가, 무도학원 등 생활체육시설 사업주(59명)와 노동자(55명, 강사·직원 등) 등 총 104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2%가 '프리랜서(위탁/도급/용역)'로 일하고 있었고, '단시간' 25%, '기간제' 10.3%로 약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의 경우, 현재의 직종에서 일하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스승, 선배, 지인 등의 소개'가 63.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가 16.4%로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2부를 작성해서 회사와 본인이 한 부씩 나눠 가졌음'이라는 응답이 54.5%,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함'이 36.4%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출퇴근 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가 69.1%, '일정이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가 25.5%를 차지했다.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국민연금 49.1%, 건강보험 43.6%, 고용보험 50.9%, 산재보험 50.9%으로 절반가량이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 업무 중에 다치는 경우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49.1%가 '개인적으로 해결(개인보험 포함)한다'고 답했고, '산재보험 처리'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업무 중 사업주로부터 경험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임금 체불(12.7%)', '부당업무 지시(10.9%)', '인격 무시(7.3%)', '욕설(1.8%)'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활체육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지원(34.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23.6%)', '기타(20.0%)', '세무 등과 관련한 법률 지원(10.9%)', '법률지원(분쟁조정)(5.5%)', '노동인권 보호 교육(5.5%)' 순으로 나왔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 운영 지출 1순위가 '사업장 임대료'로 가장 많은 59.3%를 차지했다.

생활체육 운영형태는 단독운영이 81.4%로 매우 높고, 가족(부부) 공동운영이 11.9%, 공동운영(동업 포함)이 6.8%로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운영의 제도적 측면을 묻는 질문 중 '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는 응답이 54.2%였다. 직원(강사, 직원 등)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28.8%가 '전문적인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직원 대상의 교육(인권교육, 서비스 교육 등)'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각각 18.6%를 차지해 사업주의 절반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사업 운영 자금 지원' 47.5%, '임대료 지원' 30.5%로 사업주 응답자 중 78%가 사업체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찬호 센터장은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기회에 주목받기 바라며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2023 광주지역 생활체육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충북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2년간 58건...7건은 지도자 관련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69500064?input=1195m>

비리 스포츠 지도자재취업 제도 개선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3113019000501322?feed=na>

충남스포츠과학센터, 제7차 동계스포츠과학캠프 개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129010019379>

서천중학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스포츠체험 실시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549>

[스포토픽 인천]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인천광역시 선수촌 내년 10월 준공"

<http://www.ifm.kr/news/374289>

광주광역시체육회, 2023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평가회의 가져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419>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워크숍 개최...레크리에이션 등 진행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1203/122462261/1>

용인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 협약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3061

경기 수원시, '제19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https://www.fnnews.com/news/20231205090516104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